

코리아연구원 논평 7호 (2010년 5월 24일)

Korea National Strategy Institute

www.knsi.org/ ☎733-3348, 팩스733-3358/ 100-855 서울 중구 장충동2가 186-28 우리함께회관 405호/ knsi@knsi.org

천안함과 MB외교의 중국 잘못읽기

정부는 20일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침몰했다고 공식 발표함으로써 이제 중국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중국은 혈맹국 북한이 결백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조사발표를 수용할 수도 없으며, 그렇다고 한국의 입장을 원천적으로 무시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다. 사실, 중국이 사건 초기부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강조했던 것은 이러한 난처한 상황에 직면케 하지 말라는 한국에 대한 간접적인 압력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한국이 북한의 소행임을 확정해 버림으로써 한중관계는 긴장감이 흐를 수밖에 없다.

이제 중국은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중국은 한미 양국이 거론하고 있는 대북제재에 어떠한 형태로든 동참할 것인가? 아니면, 천안함 사건 직후부터 지켜왔던 신중한 입장을 견지할 것인가? 천안함 사건의 공식발표에 대한 현재 중국의 반응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은 관련 행위자들이 냉정하고 원만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정세의 악화방지를 희망한다. 둘째, 중국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국제문제를 처리해오고 있으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및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에 전력하고 있다. 셋째, 이러한 중국의 노력과 상반되는 행위들에 대해 반대한다.

이것은 중국의 입장이 천안함 사건 직후 표명했던 것과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여전히 한국의 강경한 대북 입장과 분명한 선을 긋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후 관련국의 냉정한 자세와 긴장 심화 방지를 희망한 것은 한국에 대한 주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국이 북한을 가해자로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 한국이 어떠한 대응책을 내놓는냐에 따라 한반도의 긴장국면이 좌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대북제재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중국의 입장을 뒤바꾸어야 한다. 과연 그것은 가능한가? 불행히도 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사실 중국의 협조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기대는 4월 30일 한중정상회담 직후 단행된 북중정상회담으로 인해 무색해지고 말았다. 더군다나 중국은 김정일 방중을 “주권에 속한 내정의 문제”라거나 “6자회담과 천안함 사건은 별개”라고 주장하는 등 한국에 날선 대립각을 세우기도 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자기 예언적 대중 외교는 '순망치한'의 논리가 여전히 지배적인 북중관계의 구조적 맥락에 대한 이해부족으로부터 출발한다. 역사적으로 서로 다른 '중국들'은 왜 반복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공통적으로 개입해 왔는가? 1592년 임진왜란기 명군이 압록강을 건너고, 1885년 위안스카이가 실질적인 대조선 총독으로 부임하고, 1950년 인민지원군이 전면적으로 군사개입 했던 사실 등은 모두 지정학적 논리일 수밖에 없었다. 1994년 6월 미국이 영변폭격을 계획하던 당시에 장쩌민이 “순망치한”이란 단어를 써가며 방중한 최광 인민군 참모장을 달랬던 사실도 이런 구조적 논리였다. 중국이 김정일 정권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는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했던 것은 언제나 완충지대로서 한반도의 안정일 뿐이었다.

따라서, 중국은 그 주체가 누구든 한반도 전체의 안정이 훼손되는 상황을 철저히 차단하려는 행태를 보여 왔다. 그 주체가 경쟁관계인 여타 강대국이라면 중국은 한반도의 정치세력을 지원해 세력권 보호를 시도하였다. 임진왜란, 청일전쟁, 그리고 한국전쟁 사례가 대표적이었다. 반면, 그 훼손의 주체가 한반도의 정치세력이라면 직간접적 압력을 통해 순치시켰다. 특히, 중국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경쟁하는 여타 강대국과 타협이 가능하다면, 호전적인 한반도 정치세력을 더욱 통제하려 들었다. 임진왜란기 왜군을 추격하는 조선군을 잡아 곤장을 쳐대던 명군, 임오군란 당시 대원군을 압송해 정세악화를 방지했던 청군, 그리고 한국전쟁 당시 38선 이남으로 연합군을 퇴각시킨 후에 적극적 진격을 주장하는 김일성을 나무랐던 평터후아이의 행태가 바로 이러한 구조적 속성에 기인했던 것이다.


북한의 최근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태도 역시 이와 유사하다. 중국이 한반도를 둘러싼 경쟁국가인 미국과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 대북 통제의 수준을 결정하였다. 1993-94년 북핵 위기시 중국이 문제해결에 소극적 입장을 견지했다는 사실은 1989년 천안문 사건 이후 경색된 미중관계의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반대로, 2003년 2차 북핵위기시 중국의 적극적 문제해결 노력은 1998년 미국과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형성하고, 2001년 9.11 이후 협력적인 대미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2005년 BDA 문제에 대해 미국과 공조하고, 이후 북한의 1,2차 핵실험에 대해 전례없이 강경한 입장을 표명한 것은 그 결과였다. 물론, 그 대전제는 북한을 중국의 세력권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다면, 중국은 북한이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강경한 천안함 외교를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또 다른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더군다나 한국의 조사발표를 중국의 입장을 무시한 의도적인 행동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의 도발적 행태를 제어하기 위해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

조하듯이, 중국은 미국에게 한국을 제어해주길 기대할 수 있다. 수준은 달라도 논리구조는 동일한 것이다.

미국으로서도 중국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다. 미국은 현재 중국을 ‘이익상관자’로 규정하면서 국제적 이슈에 대해 긴밀한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 미중관계가 19세기 유럽협조체제, 20세기 미소 알타체제와 같이 강대국간 협조체제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 및 그를 통한 안정은 이러한 미중 협조체제의 핵심 의제중 하나이다. 양국이 남북한 간의 긴장격화로 초래될 상호간 협조체제의 균열을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이유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5월 24-25일 열릴 미중 경제전략 대화에서 천안함 사건에 관한 양국의 입장이 긴밀히 조율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국은 천안함 조사발표 및 한국의 강경한 움직임에 대해 미국에게 우려를 표명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미국은 동맹국 한국의 입장에 대해 원론적 지지를 표명하면서도 미중 간 협력을 통한 한반도 안정화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크롤리 미 국무부 공보차관이 21일 브리핑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인 것이 그 전조다. "한국은 전쟁을 원하지 않아" 혹은 "이번 사건은 일회성"이라는 미 당국자의 미묘한 선긋기도 동일한 맥락이다. 이렇다면,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 대북제재에 동참할 것이라는 한국의 기대는 또 다른 자기 예언적 희망일 수 있다.

역사는 언제나 구조와 행위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진다. 구조만을 강조하고 행위자의 선택을 무시하는 것은 역사의 변화가능성을 간과하는 오류에 빠진다. 반면,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선택의 자유만을 강조하는 것은 돈키호테의 환상과 다를 바 없다. 중국이 한국의 입장을 지지해 줄 것이란 희망과 중국의 구조적인 대외관계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천안함 사건을 둘러싼 이명박 정부의 대중 외교는 과연 중북, 중미관계라는 구조에 대한 엄밀한 이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예언적 희망에 근거하고 있는가? 후자라면, 한중관계의 미래는 불행히도 밝아 보이지 않는다. 불속으로 뛰어든 선택의 자유는 행위자의 몫이지만 그 결과를 감내해야 하는 것 역시 언제나 행위자의 몫이다. 그러한 현실적 비용을 정녕 감내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다면, 그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2010/05/24) 

※코리아연구원(원장 박순성)은 정치·외교, 경제·통상, 사회통합 부문에서 정책대안 및 국가전략을 제시합니다. 전화(02-733-3348, knsi@knsi.org) 또는 홈페이지(www.knsi.org)에서 코리아연구원을 후원하실 수 있으며, 후원회비 및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